

+ 김서중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또 다시 시작되는 악몽



이념이 어떻든 신문 영역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들이 방송보도 영역에 진출하는 것은 여론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역행한다.

여론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의 독과점이 어떤 불행을 초래할지 알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이 깨진 이탈리아에서는 신문과 방송 대부분을 소유한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추문과 부패에도 정치를 장악하는 현실을 목격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자명한 현실에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까.

언론에게 2008년은 악몽의 한 해였다. KBS 이사 중 한 사람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걸 빌미로 KBS 이사에서 해임됐다. 이사장은 석연찮은 이유로 사퇴, 정부는 KBS 사장을 쫓아냈다. KBS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0년 방송법에서 대통령의 KBS 사장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꾸었지만, 소위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 감사원이 동원되고 방통위가 주도했다. 독립성이 생명인 이들 기관이 KBS 사장을 바꾸기 위해 유린됐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YTN 탄압은 대통령 후보 특보를 사장으로 앉히려는 무모함에서 비롯됐다. YTN 구성원 대부분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보를 사장으로 앉히려는 시도는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다. YTN 노조가 그렇게 강하게 저항하리라 생각 못했던 것이다. 언론이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YTN 역사에 대한 이해도 없었기 때문이리라. YTN 구성원들은 IMF 당시 회사가 어려워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언론인'이라는 자존심 하나로 YTN을 지켜온 사람들이다. 대통령 특보의 사장 임명 수용은 언론 독립성 포기라는 점을 잘 안다. 그래서 6명이 해임되었지만 YTN 노조는 지금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다.

왜 이렇게 개별 언론사들을 장악하기 위해 애썼는지는 지난 연말에 명확히 드러났다. 정부 여당은 공익성에 기반 한 한국의 방송체제를 근본부터 흔드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시도했다. 법안들은 가장 중요한 여론매체인 신문과 '보도를 할 수 있는 방송(보도방송)'의 경영 또는 교차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또, 사회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경제 권력인 대기업의 보도방송 진출 허용을 포함한다. 당연히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소위 보도방송 영역에 진출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조·중·동이 보수 일색이라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념이 어떻든 신문 영역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들이 보도방송 영역에 진출하는 것은 여론의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역행한다. 영국이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에서 점유율 20%가 넘는 신문사업자의 방송 진출을 막은 것은 미디어 재벌인 루퍼트 머독의 여론지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소위 '머독법'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려는 사회적인 노력은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현실이다.

여론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의 독과점이 어떤 불행을 초래할지 알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이 깨진 이탈리아에서는 신문과 방송 대부분을 소유한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추문과 부패에도 정치를 장악하는 현실을 목격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자명한 현실에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까.

소위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들이 언론을 소유했을 때, 아니 언론을 소유하지 않고서도 어떻게 언론의 왜곡보도를 가능하게 했는지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삼성이

중앙일보와 동양방송을 소유했던 60년대에 발생한 사카린 밀수사건, 미원·미풍 조미료 원료 밀수사건에서 이들 언론이 보여주었던 삼성 옹호는 자본 권력에 좌우되는 언론의 전형이었다. 탈세로 구속되는 사주를 옹호했던 중앙일보의 보도는 언론의 사유화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X파일, 김용철 변호사 폭로 보도 이후 삼성 광고를 일체 받지 못하는 한겨레와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는 대신 광고를 받는 다른 언론들의 대비되는 현실은 자본권력의 무서움을 실감하게 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이런 법안을 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변변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통과시키려 했다. 누가, 어떻게, 이런 법 개정예 동의할 수 있겠는가? 다행히도 언론노조의 파업과 절대적 반대여론 등에 업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본회의장을 점거 저항하여 일단 악법의 통과를 막았다. 비록, 2월의 '입법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미디어관련법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디어관련법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불행한 현실을 다시 목도하게 됐다. 파행을 거듭하며 사장을 교체한 KBS는 3명의 기자와 PD를 파면, 해임하고 다수를 중징계 했다. 악법이 통과되어 신문사주와 재벌에 넘어 갈 방송의 미래를 지금 목도하고 있는 중이다. 아니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지도 모른다. 애초 입에 재갈이 물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5공 시절에 저항하다 징계 받은 언론인이 없었음은 타산지석이다. 입법전쟁을 앞두고 언론인들이 선택해야 할 길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